

# 경향신문

## [박태균의 역사와 현실] “바보야, 문제는 공정성이야”

박태균 |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·한국현대사  
입력 : 2016.12.21 20:58:00 | 수정 : 2016.12.21 20:59:11



기업 총수들과 재계 관계자들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'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'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.

정말 이상했다.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 국회의원들은 몇 번이나 기업인들에게 확인을 받으려 했다. '앞으로 더 이상 정경유착의 비리를 저지르지 않으실 거죠?' '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?' 그런데 기업인들 중 누구도 시원하게 '네'라고 대답하지 않았다. 단지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는 답변이 다였다. 그들은 1950년대부터 지속되어 온 정경유착의 교훈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.

미국의 한 연구자는 1970년대 한국과 필리핀을 비교 연구했다. 당시 두 나라는 모두 '부패'로 유명한 독재국가였다. 그런데 한 나라는 경이적인 경제 발전을 이뤘고, 다른 한 나라는 그렇지 못했다.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? 그 연구자가 주목한 것은 한국에서의 부패는 단순한 부패가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패였다는 것이다.



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단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, 부패를 통해서 그 단계를 줄여나갔다는 것이다. 좀 쉽게 얘기하자면, 세무서에서부터 구청, 그리고 정부 내 관계 부처에 이르기까지 접수를 하고 승인을 받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, '뇌물'을 통해서 그 시간을 단축하였다는 것이다. 이렇게 본다면 뇌물은 부패의 도구가 아니라 빠른 성장을 위한 '윤활유' 역할을 한 것이다.

그렇다면 그렇게 좋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왜 '김영란법'을 만든 것일까? 김영란법에 많은 위험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, 그 누구도 이에 대해서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? 바로 그것은 뇌물이 윤활유가 아니라는 점을 누구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. 그 윤활유는 일부 기득권 세력에게만 작동하는 윤활유였다.



Copyright©The Kyunghyang Shinmun, All rights reserved.